

KIPEC BRIEFS

미국의회 주요동향



목차

1. 의회 일정 및 소식	2
2. 연방의회 주요 입법 동향	4
3. 한미동맹의 변화와 미국 의회의 주요 쟁점 (CRS 리포트 요지)	5

3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음영 표시 : 의회 회의

□ 3월 주요 정치 소식

미 국토안보부(DHS) 예산 갈등 지속 및 부분적 업무 차질 발생

2026년 3월 현재, 미국 의회는 국토안보부(DHS) 예산을 둘러싼 상·하원 간 이견으로 인해 예산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상원은 일부 이민 단속 기관을 제외한 형태의 예산안을 통과시킨 반면, 하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DHS 전체 기능을 포함한 임시 예산 연장안을 추진하면서 양원 간 입장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 일부 기능의 운영 차질이 발생하며 부분적인 업무 중단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상원은 3월 27일(현지시간), 이민세관단속국(ICE) 및 국경순찰대 등 일부 이민 단속 기관을 제외한 DHS 예산안을 초당적 합의를 바탕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교통안전청(TSA), 연방재난관리청(FEMA),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일부 기능에 대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민 단속 기관의 운영 방식 및 제도 개선을 둘러싼 이견이 지속되었으며, 그 결과 일부 기관 예산이 제외된 형태의 법안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앤디 킴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해당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확보한 점을 언급하며,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가결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하원 공화당은 상원안이 DHS의 일부 핵심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이 DHS의 기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하원은 이민 단속 기관을 포함한 DHS 전체 기능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예산을 연장하는 별도의 법안을 통과시키며 협상 지속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예산 공백의 장기화에 따라 행정적 영향도 점차 나타나고 있다. 교통안전청(TSA) 인력은 급여 지연 상황에 직면하면서 결근 및 이탈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공항에서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증가하는 등 이용자 불편이 확대되고 있다. 행정부는 TSA 인력 운영 차질을 완화하기 위해 급여 지급 방안 마련 및 추가 인력 지원 등 보완 조치를 검토·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토안보부(DHS) 신임 장관 인준



2026년 3월 23일(현지시각), 미 상원은 공화당 소속 마크웨이 멀린 상원의원을 국토안보부(DHS) 장관으로 인준하였다. 표결 결과는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이번 인준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DHS

장관을 해임한 이후 후속 인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멀린 장관의 인준은 상원 국토안보 및 정부운영위원회 청문회 직후 신속히 본회의에 상정되며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었다. 다만, 인준 과정에서는 후보자의 자질과 리더십을 둘러싼 논쟁이 병행되었으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경험 부족과 과거 언행을 근거로 한 적합성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취임 이후 멀린 장관은 전임 장관인 크리스티 노옴과 차별화된 운영 기조를 보이고 있다. 강경한 대외 메시지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의회 브리핑, 백악관 회의 참석,

내부 소통 강화 등 비교적 절제된 방식으로 조직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기관 신뢰도 회복과 정책 운영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책 측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집행 방식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강제추방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반발을 완화하는 동시에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 영장 활용 확대, 지방 법집행기관과의 협력 강화, 산하 기관의 자율성 확대 등이 주요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DHS는 조직 운영 및 정책 집행 측면에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전임 장관 재임 기간 동안 의사결정 구조 혼선, 계약 집행 관련 논란, 정치적 활용 논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른 내부 불만과 외부 비판이 누적된 상황이다. 또한 강제추방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여부와 정책 메시지와 실제 집행 간 괴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쟁 대상이 되어왔다. 2026년 1월 발생한 미국 시민 사망 사건 이후 DHS에 대한 대외 신뢰도 역시 저하된 상태이다.

연방의회 주요 입법 동향

법률(안)	심의현황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미국 글로벌 투자유치법안 (S.2563)	상원통과 (2026. 3. 24.)	Todd Young (공-인디애나) (2025. 7. 31.)	미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무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검토를 실시하고, 글로벌 투자 동향, 첨단기술 분야 투자 환경, 공급망 및 안보 위협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임
이란 제재 강화법안 (H.R.1422)	하원통과 (2026. 3. 17.)	Michael Lawler (공-뉴욕) (2025. 2. 18.)	이란의 석유 및 석유화학 산업과 관련된 거래에 관여한 외국 개인 및 기업에 대해 자산 동결,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확대 적용하고, 제재 회피 행위까지 포함하여 규제 범위를 강화함으로써 이란의 핵·군사 활동 및 테러 지원을 억제하려는 목적임
FY2026 국토안보부 세출법안 (H.R.7744)	하원통과 (2026.3.9.)	Tom Cole (공-오클라호마) (2026. 3.2.)	2026 회계연도 국토안보부(DHS)의 운영을 위해 예산을 배정하는 세출법으로, 장관실 및 행정관리, 정보·상황인식, 감사 기능 등 부처 운영 전반과 함께 국경·이민, 재난 대응, 사이버보안 등 핵심 분야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보고 의무, 감독 강화, 시범사업 관리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핵심광물 목록 일원화법안 (H.R.755)	하원통과 (2026. 3. 4.)	Juan Ciscomani (공-애리조나) (2025. 1. 28.)	2020년 에너지법을 개정하여 핵심광물과 핵심소재 목록을 통합·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이에 따라 내무부와 에너지부가 각각 관리하던 목록을 하나의 통합 리스트로 작성·공표하도록 규정함. 기존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목록의 신속한 업데이트 및 부처 간 협력을 의무화함으로써 핵심 자원 관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중소기업 관세부담 완화법안 (S.4038)	발의	Edward J. Markey (민-매사추세츠) (2026. 3. 10.)	특정 관세의 적용에서 중소기업을 면제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한편, 관세를 이유로 한 과도한 가격 인상을 금지하고 이를 규제·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

한미동맹의 변화와 미국 의회의 주요 쟁점(CRS 리포트 요지)

1. 보고서 개요

본 보고서는 한미동맹이 전통적인 대북 억지 체제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을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안보 동맹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한다. 최근 동맹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한미동맹의 기능 및 적용 범위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 한미동맹과 미국 의회의 역할

한미동맹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형성되었으며,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 발효 이후 유지되고 있다. 현재 한반도에는 약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이 배치되어 있으며, 주요 전력은 캠프 험프리스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한국군 또한 약 57만명의 현역과 약 310만명의 예비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한미동맹은 군사협력을 넘어 첨단기술, 경제안보, 글로벌 보건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며 보다 포괄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 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동맹의 전략적 역할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의회는 국방수권법(NDAA) 제정,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해 주한미군 운용, 대비태세, 확장억제 정책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관련 사안에 대해 입법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 한반도 내 군사 지휘체계 구조

한반도에는 주한미군(USFK), 유엔군사령부(UNC), 한미연합군사령부(CFC)가 병존하고 있다. 각각 미국 단독 지휘, 다국적 지휘, 한미 연합 지휘 체계를 구성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된다. 유사시에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중심이 되어 통합 지휘를 수행하는 구조이다.

4. 의회의 주요 쟁점

가.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 역할

한미동맹은 전통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 대응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미국은 주한미군을 한반도 외 지역의 안보 위협 대응에도 활용하는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제시해 왔다. 2006년 한미 공동성명은 해당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의 비자발적 분쟁 개입 우려를 반영한 바 있다. 이후 동맹은 2022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언급되며 협력 범위가 확대되었고, 2023년 '한미동맹 국방비전'에서도 역내 협력 확대가 제시되었다. 최근에는 동맹 현대화 논의와 함께 전략적 유연성 관련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나. 방위비 분담

한국은 1991년 이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 왔다. 분담금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수지원, 시설 건설비 등으로 구성되며, 최근 협정은 5년 단위로 체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해당 제도는 미국의 재정 부담 증가와 한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분담 확대 요구를 배경으로 도입되었으며, 협상 과정은 주요

정책 현안으로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2021년 체결된 11차 협정은 분담금 인상률을 한국 국방예산 증가율과 연동하였고, 2024년 체결된 12차 협정(2026~2030년 적용)은 물가상승률 연동 및 상한 설정, 협정 공백 시 근로자 급여 유지 장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2025년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추가 지원 계획은 구체적 구성과 기존 협정과의 관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 한반도 확장억제 정책과 한국 내 핵무장 논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근거가 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핵우산’으로 지칭된다. 미국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통해 확장억제 정책의 지속을 명시한 바 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발전과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전술 핵 재배치 및 독자 핵무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한미 양국은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2023년 워싱턴 선언을 통한 핵협의그룹(NCG) 신설 등 협의 및 공동기획 체계를 구축해 왔다.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등을 통해 확장억제 관련 조치를 지속해 왔으며, 한국 내에서는 핵무장 관련 사안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는 가운데 정부는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미국 의회는 결의안 및 국방수권법(NDAA) 등을 통해 확장억제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왔다.

라. 조선업 분야 협력

미국 내 조선업 생산능력과 해군력 유지 문제와 관련하여, 동맹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과의 협력은 조선 기술 협력, 미국 내 투자, 유지·보수·정비(MRO)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미국 조선업체와 한국 기업 간 기술 협력 관련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으며,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조선소 투자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일부 함정에 대한 MRO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미국 법률은 외국 조선소에서 군함 건조 및 정비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으며,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와 예외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는 관련 법령 및 정책 방향에 대한 검토가 지속되고 있다.

출처: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R48877?hl=R48877&s=1&r=1>

*본 보고서는 2026년 3월 16일 CRS가 발간한 U.S.-South Korea Alliance: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총40페이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발행일 2026년 3월 30일	발행처 한미의회교류센터
『KIPEC BRIEFS』는 한미의회교류센터가 고객을 대상으로 월 1회 발행하는 미국 의회 입법 및 현지 소식입니다.	

KIPEC is registered under FARA. This material is distributed by the Korea Inter-Parliamentary Exchange Center (KIPEC) on behalf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dditional information is on file with the Department of Justice, Washington, D.C.